

금융산업노조 상반기 평가

최규덕

전국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1. 금융산업노조가 만들어지기까지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의 지원국가로 전락하고 대규모 금융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5개 은행 퇴출, 5개 은행의 합병 등 4만여 명의 금융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IMF와 정부의 정책합의 사항을 금융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실물부분의 부실이 그대로 금융권으로 전가되어 금융기관이 국가신용을 유지시키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제일, 서울은행을 필두로 대규모 기업과 거래 하였던 시중은행들이 국유화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IMF가 요구하는 FLC(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으로 금융기관은 적자기업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던 중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간 대우처리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처리시기를 놓치고, 66조라는 대우계열사의 부실채권이 금융계에 떠 안겨지면서 또다시 제2차 구조조정의 태풍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금융노조총연맹도 7월 10일 연세대에 모여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금융노조원들. 7월 11일 금융노조원들은 사상 초유의 금융부문 파업을 성공시켰다.

1998년 9월 금융인 대학살로 불리는 이 시기에 금융노동자들은 자발적인 내부 동력에 의해 3만여 명이 명동성당에 집결하고, 퇴출대상 직원숫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은행측과 교섭을 벌이던 금융노련 지도부는 총파업 선언을 하고서도 몇몇 노조의 이탈로 인하여 조직의 대오가 무너지면서 총파업 돌입에 실패, 대규모의 감원 바람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던 금융노련은 1999년 이용득 집행부가 탄생하면서 과거의 실패가 전술, 전략의 실패에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기업별노조와 연맹체제라는 태생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산별노조 건설을 제1차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금융산별 건설만이 다가올 제2차 금융구조조정이 라는 후폭풍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

며, 정부와 IMF와의 정책협약에 따른 금융산업 개편 문제가 제2차 구조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우선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국가가 되었던 배경, IMF의 실체 등으로 문제 접근을 시도하였다. 세계화의 문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 국제적 투기자본(헤지펀드)의 패배 등을 연구하는 한편, G7 정상회담에 항의단 파견, IMF 제소, 대구라운드와 금융노련의 결합으로 인한 국제적 네트워크 설정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활동들은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특위)에도 참여하여 노·정간의 활발한 논의구조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급정당도 없고 의회 내 노조를 지원해주는 우호세력도 미미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쨌든 현안 구조조정 문제는 노정문제이고 노사정위원회가 노·정 관계에서 금융정책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추후 명분 축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2. 금융산별노조 출범 후 교섭구조의 변화와 단체협약

2000년 3월 3일 1년여의 작업 끝에 금융산별노조 출범을 알리는 창립대의원대회가 치러졌다. 조흥, 한빛, 국민, 주택, 서울, 제일은행 등 전국의 굵적굵직한 18개의 조직과 6만 5천명의 조합원이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산별조직으로 전환하는데는 기업별노조 대의원들의 조직형태 변경, 산별규약 정립, 지부규약과의 관계, 간부조정, 조합비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걸려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정비하면 되겠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임·단협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었다. 다행히 금융노련 산하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이 집단교섭의 오랜 경험이 있었고 특히 작년도에는 연봉제 열풍이 불면서 이를 받아치는 차원에서 연봉제관련 교섭 및 임·단협 교섭 권한 및 체결권을 상급단체로 위임토록 하여 공동교섭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와 교섭구조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섭구조의 집중화·분권화 문제가 미국, 유럽등 선진국 노조간에, 또 학자들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교섭의 집중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임자수 축소와 2002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완전금지, 신규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꾼 신노동법 하에서 기업별노조 체제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조직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섭구조의 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왔다.

금융산별노조 출범 후 2000년도 임·단협 교섭을 조직형태에 맞는 교섭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앙교섭(통일교섭)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단체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통일교섭 자체가 불가능하여 18개 노사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 양측 각각 7인씩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기존의 공동교섭과 통일교섭의 중간 형태인 약간 기이한 형태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는 은행연합회가 있으나 은행연합회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항에서 정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경련과 경총처럼 향후 노사관계 문제에서 사용자단체를 따로 구성하든지 은행연합회 장관을 고쳐서 은행연합회가 사용자단체 역할을 하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단합의 문제에서는 18개 지부 단협이 각각 있지만 다른 연맹에 비해 업종의 동질성이 강한 만



노정합어를 이룬 노정대표단. 왼쪽부터 이흥득 금융노조위원장,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이흥근 금융감독위원장.

큼 1개의 통일단협과 각각의 지부단협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 교섭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하여 지난 5월부터 133개 조합의 통일단협안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 중에 있다. 금융산별노조 출범 → 통일단협 마련 → 통일교섭 정착 → 기존 계약규 개정 정비 → 산별노조 완성. 이것이 금융노조의 산별화의 큰 흐름이다.

3.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 투쟁

금융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7.11 총파업 투쟁은 비록 하루만에 끝이 났으나 국내외 언론과 여론에 상당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 및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이 단순한 임금·고용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전반에 걸친 정책적 요구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금융노조가 산별로 묶여있긴 하였으나 매우 느슨한 형태이고 또한 각 기관별, 지역별로 팽팽한 경쟁관계에 있던 터라 총파업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6000여 개나 되는 사업장을 독려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금융노조 총파업은 한마디로 "일년간의 준비와 단 하루의 파업투쟁"이라 할 만큼 제한 여건이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만 엄청난 노력이 수반된 한판 승부였다. 1998년도의 깨배감을 극복하고 일방적 금융구조 조정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분산되고 파편화된 조직체계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했다. 이러한 반성에서 힘을 하나로 모았고, 관치금융의 실체를 밝히고 일방적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어 나갔다는데 성과가 있었다. 금융산업이 필수 공익사업장인데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총파업의 파

급효과도 엄청나다는 판단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하였으나 노·정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결과를 차지하면 총파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의 목표를 '정부의 잘못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고 국민에게 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가 관치를 인정하고 향후 관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수정시켰고,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총파업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 및 한계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하나, 추후 정확한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요컨대 금번 총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1998년도에는 "어느 조직이 이탈했다"는 소식이 대오가 무너지고 총파업이 불발로 끝난 반면 올해에는 "조직의 대오가 아직도 몇 만이나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총파업을 가능케 했다. 이것이 바로 기업별 체제와 산별체제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4.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향후 전망과 과제

2000년 상반기 임단투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한교조 등 산별노조의 투쟁역량이 훨

씬 강화된 감이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변경, 고용조건 변경 등 개별 사업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각 연맹에서 산별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현재 금융노련과 병존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까지의 연맹산하 모든 회원조합이 산별 가입을 완료하고 연맹은 해체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산별체제가 우리나라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체제이기는 하나 산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본조가 지부를 강력히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 긴밀한 신뢰관계, 대규모 사업장과 군소 사업장과의 이해관계 등등 전제가 되어야 될 조건이 너무 많다. 지부 조직에서는 본조를 해결사 또는 청부업자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고, 지부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다. 산별규약과 지부규정 등 관련 규약 정비를 통해 본조와 지부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고, 간부 배정 및 조합비 배정, 사업계획 작성도 본조와 지부의 명확한 역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조직형태만 산별이 되어서는 기존 연맹체제만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산별이라는 훌륭한 틀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운동 시스템을 채워 넣어야 현재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가장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는 명실 상부한 산별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